

보도시점 6. 26.(금) 조간 < 6. 25.(목) 15:00 >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개최

- 중기부, 부당개입행위의 법적 정의와 금지·처벌 규정, 조사권한 및 수사의뢰 체계, 신고 및 포상체계 강화 등 법제화 세부방안 발표
- 6.29일부터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월 25일(목) 서울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6.6.25(목) 15:00 / 서울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글로벌성장국장, 기업금융과장, 벤처정책과장, 기술개발과장 등
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관계부처 경찰청
- (주요내용)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주요과제 논의, 관계기관 협업과제 논의 등

이번 TF 6차 회의에서 중기부는 2026년 1월 1일(목)부터 6월 19일(금)까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48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주요 처리 현황을 보면, 정책금융기관이 주의공문 발송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412건(8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건은 8건(1.7%),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건은 1건(0.2%)이었으며, 제3자 부당개입 여부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은 27건(5.6%) 등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은 수사 의뢰로 이어진 신고 등 주요 신고 6건에 대해 신고포상금 220만 원을 우선 지급했으며, 추후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지급도 검토할 예정이다.

수사 의뢰 주요 사례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 상징(CI)을 무단 사용하면서, 대출 성사 조건으로 계약 및 착수금을 수령했으나, 실제 대출이 성사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대출거래 약정서 및 신용보증서를 위조하여 정책금융기관이 발급한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사례도 있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으로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관련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당개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간 관계기관과 논의해 온 법제화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당개입행위의 명확한 정의 및 금지·처벌 규정 신설

정책자금 신청과 관련해 허위 서류 작성·제출을 유도하거나, 거짓·과장·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기업을 속이는 행위, 자문 보수 상한을 초과해 보수를 받거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② 부당개입 조사 권한 및 수사의뢰 체계 명문화

중기부가 부당개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출석·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③ 신고 활성화 및 포상 체계 강화를 위한 제반규정 신설

부당개입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신분 비밀유지 등 보호 조치를 명시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명문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법률개정 전까지 현재 신고·접수 및 수사의뢰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제3자 부당개입을 예방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 29일(월)부터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고기간에는 옥외광고, 홍보물 배포와 홍보영상 송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당개입의 불법성과 신고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신고기간 중 제3자 부당개입과 관련된 정책자금신청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 적극적·중대 가담자라 하더라도 참여제한 및 약정해지를 전면 면책하는 등의 조치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포상의 경우 신고 소액포상금을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함께 운영한다.

TF 6차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고, 법제화 전까지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6월부터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조성우 (044-204-7520)
		담당자	서기관	성대현 (044-204-7616)

